

환경친화적인 포장재 및 포장디자인 개발해야 할 때

## 10년 뒤쳐진 환경정책의 정상궤도 진입 소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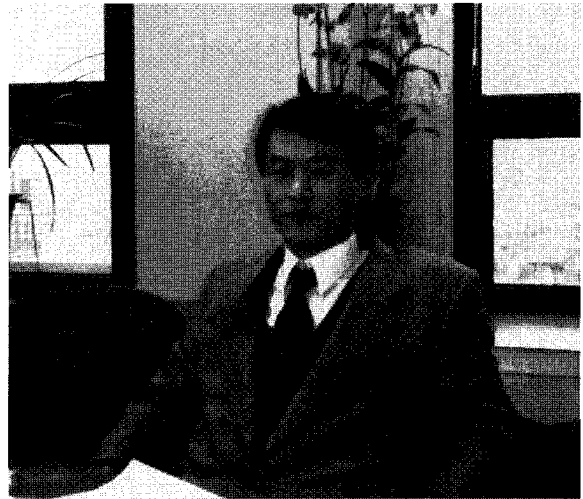
오종극 / 환경부 폐기물정책과 사무관

**자신의** 일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추측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오종극 사무관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지만 인사를 건네는 오 사무관에게서 공무원의 정돈된 분위기를 느끼며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느낌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할 즈음 공무원이 자신의 길이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게 되었고 89년에 환경부의 일원이 된 이후로 그 신념을 한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는 오 사무관은 “이제 환경문제는 더이상 몇몇 사람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환경과 경제가 통합되어 가는 추세 속에서 비중이 더해진 환경문제는 정치·사회·경제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포장과 관련되어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도 포장폐기물의 문제입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50%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약 25%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포장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량도 문제겠지만 이런 폐기물이 자원으로 재사용되도록 해야 함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라며 포장폐기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포장폐기물을 국가가 처리하고 있지만 선진국은 철저하게 생산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환경부는 이후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비용부담의 주체를 확실하게 하고 포장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해 생산자가 책임지도록 정책의 방향을 전환시켜 나감과 동시에 환경정책의 정착과 국민들의 인식정착에 힘쓸 것이라고 한다.

과거 포장관련 규제들이 과잉·과대포장에 대한 벌점형식을 취한 후 공진청에서 공고하는 초보단계에 불과했는데 오 사무관은 이제 이런 규제들이 좀더 구체화되어야 하며 기존 포장의 기능에 환경친화적 포장의 개념이 더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친화적 포장의 개념을 포장의 감량화(과잉·과대포장 지양, 자원절약, 폐쇄·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포장방식 선택), 포장재질에 있어 가장 문제



▲ 오종극 사무관

시되는 난분해성과 유해성 재질의 사용 지양, 포장재의 자원화(재활용이 불가능한 복합재질의 포장재 규제)라고 제시하며 앞으로 포장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 식별표시제를 도입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본 포장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환경친화적인 포장재와 포장디자인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포장재 생산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오 사무관은 앞으로 기업과 통상산업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험의 부재와 시스템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은데서 오는 산발적인 포장폐기물 감량화 방안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행정력이 집중되고 홍보효과와 국민들의 인식도의 3박자가 맞아 떨어져 폐기물이 30% 감축되고 재활용품이 40%나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지난 95년을 종량제의 해라고 말하는 오 사무관은 “공무원이 무슨 큰 소망이 있었습니까? 선진국에 비해 10여년 정도 뒤쳐 있다고 판단되는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소망이라면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라며 소탈한 웃음과 함께 작지만 원대한 포부를 털어 놓았다. □

윤지은 기자